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첫날 지급률 15%

개발·보전 균형 이루는 수질관리 총력

도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목표 수질·배출허용량 발표

하루 만에 대상자 180만 명 중 26만여 명 수령·무주군은 마을 담당관 제도로 배부율 60% 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전 도민에게 지급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첫날 15%의 지급률을 나타냈다. 전북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첫날인 5일 하루 만에 총대상자 180만 명 중 26만여 명이 수령하며, 15% 높은 지급률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사용금액도 14억 원에 달한다. 특히, 무주군은 긴급재난지원금 배부를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 담당관 제도를 통해 첫날인 5일 기준 배부율이 무려 60%에 달했다.

지난 6월 17일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전 도민에게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 결정했다.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을 위해 전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 5월 제38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1,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시·군 관련 부서들과 담당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확

정하고, 시·군별 세부 수립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지난 5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가 시작했다. 신청 첫날부터 많은 도민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등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북도는 도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혼잡도를 줄이는 등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각 시·군과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도는 재난지원금 신청 공간이 협소하고, 신청 대상자가 많은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실내·외에 신청 부스를 마련해 분산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혼잡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급 현장에서 혼잡을 막고 순차적인 지급을 위해 실시한 출생연도 5부제 배부방식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도민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가 '4단계(2021~2030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계획기간 동안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BOD, T-P)을 관리하는 것으로, 도내 25개 단위 유역의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목표 수질 및 배출허용량 등이 담겨있다. 이번 4단계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이 설치되며,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 오염원 관리 및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4단계 목표 수질은 3단계 대비 BOD 2.2~12.5%(5개 단위 유역), T-P 3.2~25.6%(12개 단위 유역)로 강화됐으며, 용담댐 등 그 외 단위 유역은 3단계 목표 수질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또한, 하천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량은 BOD 81.263kg/일, T-P 5.807kg/일로 설정됐으며, 2030년 4단계 최종연도까지 개발사업 및 삭감시설 등을 통해 관리된다. 삭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97개

소(3,522천톤/일)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8개소(2,770톤/일)를 2030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총 2조 1,360억원(국비 65%, 지방비 등 35%)이 소요된다. 개발사업 추진 시 소진되는 개발가능량은 BOD 9,346kg/일, T-P 713kg/일로 혁신도시 약 70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시·군의 개발수요량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2030년까지 개발가능량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상에서 확정·승인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및 개발가능량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시·군에서는 연도별 배출허용량 등을 결정해 도 승인을 받아,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연도별 배출허용량을 초과 시 추가 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4단계 최종연도인 2030년 배출허용량을 초과 시 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인권위원회 출범

분야별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활동 전문가 구성

전북도가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설 '제4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도는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당면직 위원 3명을 포함한 15명의 인권위원을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제4기 위원 중 당면직 위원인 전북도 복지여성보안국장장과 대외협력국장, 인권담당관을 제외한 위촉위원 12명에 대해서는 연인 5명과 도의회 등 분야별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해 7명을 선정해 구성했다. 위촉위원 12명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활동에 앞장서 온 전문가들로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주민, 시민단체 및 학계, 도의회, 인권법률가, 노동, 사회복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위촉직 위원은 지역 안배와 성별 균형, 위원회 중복, 동일 위원회 2회

초과 연임금지 등을 고려했다. 전북도 인권위원의 임기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2년이다. 임기 동안 전북도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인권침해 등 인권 의제에 대해 심의, 자문, 권고 기능을 수행하며, 인권업무에 대한 대내외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위촉장을 수여하며, "도 인권 비전인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4기 인권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전북도에서는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인권교육을 의무 시행하고, 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인권조직 보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2021년 제4기 전북도인권위원회 임원 구성회의



전북도가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설 '제4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를 통해 민간위원 중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실용훈 교수 위촉, 익산성폭력 상담소 도성희 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위촉위원들은 인권정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으며, 제4기 전북도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도는 전북도인권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선출하고, 인권정책·인권조사 등에 대해 도지사에게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12월 인권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대한한돈협회 전북협의회, 3천만원 상당 돼지고기 기탁

(사)대한한돈협회 전북협의회(협의회장 이웅렬)가 도내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에게 전액기탁하며, 3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탁했다. 도는 (사)대한한돈협회 전북협의회가 전북도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달라며, 돼지고기 2,500kg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돼지고기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한돈 농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돈 농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것으

로, 7월 말까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소외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대한한돈협회 전북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돼지고기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으로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눔 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풀어 주신 전북도한돈협회 회원들과 이웅렬 회장께 감사드리며, 전북도 양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여름휴가 분산 시행

전북도가 어린이집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보육 교직원의 여름휴가를 분산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예방접종, 백신 휴가, 개인 휴가 등을 고려해 휴가가 여름철 특정 기간인 7월 다섯째 주에서 8월 첫째 주에 집중되지 않도록, 6월 넷째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분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간 어린이집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통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달리하며, 7월 말경부터 8월 초에 순번제로 휴가를 실시해 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뿐만 아니라, 재원 아동 보호자의 협조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호자 가정에 통신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필요한 경우 등원 자제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휴가 분산을 시행하면서 긴급 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불연 사항에 대해서

는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나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를 통해 접수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영석 복지여성보안국장장은 "어린이집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보육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며, "보호자 분들도 보육 교직원 선제검사, 예방접종, 휴가 기간 동안 가급적 아이의 등원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